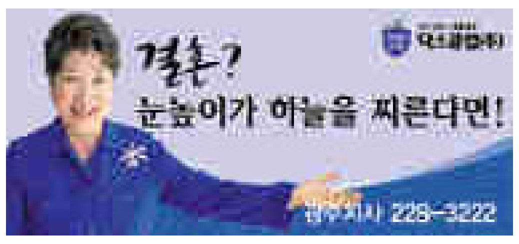
光州日報



제1755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6년 9월 20일 (음력 7월 28일) 수요일

광주~무안 고속道 '반쪽 개통' 안된다

도로公, 평동산단 진입로 개설않고 내년말 완공 추진

기아 수출차량 등 우회 수송따른 물류비 증가 불보듯

'광주~무안 광주 고속도로'가 오는 2007년 말 개통 예정이지만 고속도로와 평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평동산단 진입도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광주~무안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광주~무안 고속도로는 총 연장 41.46㎞로 고속도로의 성격상 국지도 49호선(해남~원주, 2008년 개통)과 연결돼 전남을 중심으로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당초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가 합의했던 국지도49호선에서 평동산단에 이르는 총 연장 1.8㎞의 평동산단 진입도로는 정작 개설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공사와 건교부는 평동산단 진입도로는 도로 성격상 국가도로라기 보다는 지방도로서 광주시가 개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무안 고속도로의 개설 효과는 물론, 2007년 말 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될 예정인 무안국제공항 개항의 시너지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호남 최초의 국제공항과 연계되는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음에 따라 광주 평동산단의 물류와 광주시의 항공수요가 무안공항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평동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평동산단 284개 입주업체들의 물동량과 기아자동차의 수출 차량들은 광산구 운수동 교통광장으로 돌아 목포항으로 이동하는 등 약 4㎞ 이상을 우회한 뒤 고속도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수송불편은 물론 물류비용 증가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8월 평동산단 진입도로는 도로공사가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맺은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의 합의에 따라 도로공사가 평동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교부와 도로공사에 건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광주 광산)의원도 수차례 도로 개설을 건의했었다.

광주시는 평동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될 경우 평동산단 입주업체와 기아차의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오는 2008년 분양예정인 평동2차공단 2·3공구의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 평동산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평동산단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목포항으로의 물류 비용은 물론 향후 강원도지역으로 물류 이동이 용이해지는 만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진입도로를 개설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지도 49호선~평동산단'도로는 총 연장 1.8㎞, 왕복 4차선 도로로 175억원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평동산단 진입도로 위치도

'전효숙 인준' 또 무산…헌재 공백 장기화

"국정 혼란 언제까지…" 국민들 분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법률 절차상 하자에 대한 여야간 이견과 대치로 19일 본회의에 또 다시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이같은 헌재소장 장기 공백 사태로 인해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은 대통령 사과와 법사위 회부를 인준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여권이 받아들였는 데도 인준 불참이라는 당초 요구와 배치되는 선택을 했다.

또 절차상 문제를 일으킨 청와대의 인선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을 외면한 채 지엽적인 절차 문제에 메달려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난도 거세다. 광주일보가 지난 15일부터 3일동안 본보 인터넷 패널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가 '한나라당의 전효숙 후보 반대는 정략적 대응'이라고 응답, 야권의 행태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임명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자를 전제로 한 지명절차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타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 역시 별도로 가진 회담에서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전 후보자 임명안은 의결정족수(149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야 3당은 ▲여야 합의없이 임명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적법절차에 따라 전효숙 인사청문건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한나라당도 참여한다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중재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야 3당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다.

한나라당이 중재안 거부 입장을 통보하고 퇴장한 뒤, 나머지 야 3당은 계속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이날 임명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독서의 계절…좋은 책 나눠봅시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광주 무등도서관과 아가페연합회가 19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한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에 참여한 북구 운암동 성덕유치원생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책으로 맞바꾼 동화책을 선생님과 함께 읽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산·섬진강 수질개선

2015년까지 6조 투입

환경부, 생태벨트 등 조성

환경부가 오는 2015년까지 6조원의 예산을 들여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질을 개선키로 했다. 하수도 시설 확충과 '수변 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수질환경기준 강화가 핵심 사업이다. 영산호 준설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도 실시된다.

환경부는 19일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등이 포함된 '4대강 수질보전 기본계획(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획 기간 동안 주암댐 상수원 상류에 습지 수림대 등 '수변생태벨트'를 조성, 양서·파충류 및 야생동물의 서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질환경기준 중 건강보호 항목'을 현행 9개에서 30개로, '특정수질 유해물질항목'은 현행 19개에서 35개로 각각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더불어 영산강 하구호 주변습지 복원과 하구둑 어도(魚道) 설치사업 등이 포함된 '영산강유역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수질을 되레 악화시킨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영산호 퇴적물 준설(浚渫) 사업'은 내년까지 용역조사를 실시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섬진강에 대해서는 하구 해안지역에 밀집된 공단으로 인해 생태계가 많이 훼손됐다고 판단, 국내 최초로 하구관리 시범사업인 '섬진강하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현재 76%인 '좋은 물' 비율이 89%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63%에서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가 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편성한 예산은 총 6조414억원으로 ▲하수도시설 확충(4조6천922억원) ▲수생태 복원(7천786억원) ▲카드뮴과 납 등 위해성 물질 관리(1천797억원) ▲빗물 등 비점오염원 관리(3천140억원) 등에 각각 투입된다.

하지만 영산강·섬진강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강(10조 7천506억원)·낙동강(9조6천716억원)·금강(6조2천800억원) 등 다른 수계에 비해 적은 규모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승환 유역계획과장은 "당초 환경부에 4조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크게 증액됐다"면서 "이번 계획은 과거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건강 보호와 수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美, 대북제재 완화 요구 일축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를 말리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 명분인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조사를 조기 종결토록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오히려 일본의 대북 추가조치를 환영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5면〉

18일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결의안과는 별도의 추가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이 영영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미 정부의 추가 제제 조치를 만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국무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히 "일본이 대북 미사일 발사관련 제재를 발표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공교롭게도 19일이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1주년이지만 일본의 조치는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조치"라며 미국측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은 지난 7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BDA 조사 조기종결 요구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BDA 조사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문제로 미국의 법집행 문제"라며 "재무부 동료들에 따르면 현재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로선 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조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고 말했다. 조기종결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념 前 부총리 계좌 추적

외환銀 헐값매입 의혹 수사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계좌추적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진 전 부총리의 차명계좌 및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이달 14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2002년 4월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투자컨설팅업체인 인베스투스 글로벌 전 대표인 김재록씨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채 수사기획관은 "이번 계좌추적은 진 전 부총리와 김재록씨의 돈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뚜렷한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론스타 사건과 관련이 있다. 외환은행 매각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다"며 금품 로비 의혹 조사를 위해 계좌추적에 나섰음을 시사했다.

법원이 모든 형태의 영장을 엄격히 심사해 발부하는 최근 추세로 미뤄 검찰의 이번 계좌추적은 모종의 수사단서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